

“독립운동가 최대한 발굴할 것”

문 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독립운동가 정책, 과거 역대 정부에서 부족
동포사회, 독립운동가 후손 발굴 도움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독립운동가를 최대한 발굴하고, 후손들을 제대로 모시는 보훈 정책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는 진실을 하면 3대가 평평 거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진실한 사람들은 당대에 평평거릴 수 있었고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유학도 보내 해방 후에도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정부 부대변인이서 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반면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가족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다시피 한

가족들도 있고,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오랜 세월 고생을 해야 했다”며 “그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해방된 조국이 해야 될 일인데, 과거 우리 역대 정부가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불이켰다.

그러면서 “그런 점들을 반성하면서 독립 운동가를 최대한 발굴해내고, 또 그 후손들을 제대로 모시려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들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영

국, 브라질에 거주하는 8개국 66명의 독립유공자들이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가 많고, 독립운동가는 찾아서 서훈까지 다 미쳤는데 그 후손을 찾지 못해서 서훈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아직 많다”며 “1000 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현지 고려인들 모임이라든지 중국의 동포사회에서도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발굴하는 일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찾아서 제대로 우리가 모시는 일에도 함께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남북이 함께 독립운동가를 발굴할 수 있는 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남북 관계가 앞으로 좀 발전한다면,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독립 운동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후손들을 찾아서 대접하고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참 한국에는 봄이 시작됐다

며 “오늘 함께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쫄국’이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군 비행학교 교관 장병훈 선생의 외손녀인 심순복 씨, 구한말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이끌고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다 순국한 의병장 허위 선생의 증손녀 허준화 씨 등 64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했다.

영국 출신 독립운동가 故 에니스트 토머스 베넬의 손녀인 수잔 제인 블랙 씨 등도 초청됐다. 그는 대한매일 신보, 코리아 데일리뉴스를 발행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을 세계 각국에 알렸던 독립운동가다.

초청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지난날 27일부터 6·7일의 일정으로 방한해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서대문형무소와 독립기념관 등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다.

영국인 베넬 선생의 후손인 수잔 제인 블랙 씨는 이번 초청을 계기로 베넬 선생의 유품을 국가보훈처에 기증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 “북미 실무대화 조속 재개 노력”

NSC 전체회의서 “북미 입장 차 정확히 확인... 간극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 1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중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다”며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 주길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계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SC는 국가 외교·통일·안보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14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취임 후 9번째 NSC 전체회의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포괄적 합의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

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도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라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를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함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강경화 “북미 대화 재개 촉진... 1.5트랙 개최 추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스웨덴 북미 3차 회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중국·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미 대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대응 방안 보고에 앞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이 ‘영변+플루토늄’에 대해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관건이고, 이것이 향후 협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여야, 3월 국회 개의 홍영표 “이르면 7일”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두 달여 동안의 공전을 끝내게 됐다. 국회 개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는 불발됐지만 결과적으로 국회는 개의하게 된 것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일 오전 국회 정소화를 위한 ‘담판 회동’을 벌였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회동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중재안을 내세웠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거나 할 역할이 없다”며 먼저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화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당은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비리, 신재민 전 사무원 폭로건,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등을 요구하며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서 왔다.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양당 대립에 국회 공전이 지속되어온 터였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 공지를 통해 이르면 7일 3월 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전북과의 문화교육 교류 방안 논의

라오스 투앙프라방주 고위급 인사 방문
송성환 전북도지사 등과 우호 교류간담회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유명한 라오스 투앙프라방주(유네스코 등재 도시)고위 관계자들이 전북과의 문화교육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전북을 방문했다.

사이싸먼 콤포팅 투앙프라방주 복지청장, 외무협력청장, 산업무역청장, 교육체육청 부청장, 농림삼림청 부청장 등 투앙프라방주 고위급 공무원 7명은 이날부터 8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투앙프라방주 방문단은 첫날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과의 우호 교류간담회를 통해 전북과 투앙프라방주 지역간 기업교류 활성화 등의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학생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5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예방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도 관계자들을 만나 베트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북형 개발협력사업’도 제안할 계획

이다.

이들은 방문기간동안 농업기술원, 새민금 홍보관, 미륵사지, 전주한옥마을 등 전북 주요 관광지를 시찰하고, 동양농기계 회사를 비롯한 농업시설과 완주지역에 있는 한지생산지에도 둘러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라오스 투앙프라방주를 방문했던 박용근(장수) 도의원은 “두 지역이 한지산업으로 유명한 만큼 한지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라오스가 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아 유학생 유치를 추진한다면 양 지역 교류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라오스는 전북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어, K-POP’ 등 문화분야, 한지 등 산업분야, 국제유학 등 교육분야 등에서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라오스와 전북도가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성창호, 신변보호 조치 받아

김경수(52)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직후 법원에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법은 지난 1월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성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신변보호는 성 부장판사 출퇴근 길에 이를 정도로 법원 방호원이 동행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던 당시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를 향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하였기 때문이다”고 크게 반발해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선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성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에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석공터 사건 이후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시행내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기획총괄심의관을 회장으로 한 협의회는 직권 또는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소속 대법관, 법관, 법원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건, 지난해 5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두번째다. 성 부장판사보다 앞서 지난 1월에 법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간사로 지난날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뉴시스

안호영 의원, 완주서 의정보고회

오늘부터 19일까지 진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이날 5일부터 완주군에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안호영 의원은 5일 경천면과 운주면을 시작으로, 6일 고산면·동상면, 8일 소양면·구이면, 12일 용진읍·상관면, 15일 삼례읍, 16일 봉동읍, 18일 이서면, 19일 화산면·비봉면 등 13개 읍·면에서 의정보고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의정활동보고회를 통해 2018년을 비롯해 그간 의정활동에서 펼친 원내 및 국회활동, 법률 제·개정안 발의,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확보 등과 함께, 완주군 각 읍·면의 현안 추진상황과 민원 해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완주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국회의원의 활동은 1년 내내 쉴 틈이 없다”며 “이번 완주군 의정보고회는 물론이고, 주민을 자주 찾아 보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한발짝 더 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남원 주생초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

재원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남원 주생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은 4일 남원시 주생초교 개방형다목적체육



관 건립 사업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8천만원 등 총 사업비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금(30%), 지방비(20%), 도교육청 예산(50%) 매칭으로 진행된다.

이용호 의원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재학생들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고, 지역 주민들 역시 체육활동 및 문화 행사를 하는데 있어 더 이상 공간 걱정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